

농협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최근 농협 개혁운동의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개 방향의 모색

1. 농협 개혁, 일관된 개혁 의지와 신뢰의 문제이다

국내외 농축산물 유통 및 금융업 여건이 급변하면서, 농민조합원들의 시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농축협 개혁은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선진 농축협들은 산지유통사업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통해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구미 장천농협 및 파주 교하농협의 해산사태와 경북·충북 지역 농협 개혁운동은, 가

장 기초적인 농축협 내부의 민주적 경영 투명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들 농협의 개혁 운동의 근본 원인을 잘 살피고 대안을 찾아내야만 진정한 농축협의 개혁과 경제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다.

경북·충북지역의 농협 개혁운동을 통해 한농연 회원 및 농민조합원들은 회원농축협의 민주적 투명 경영을 위한 개혁 조치들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임직원들의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 괴산, 증평지역 5개 농협 개혁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농협 운영의 공개 및 민주화	-본소와 지소에 이사회 회의록과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객장에 비치 -대의원총회에 제공하는 예·결산서와 중앙회에 제출하는 예·결산 보정보고서를 비치 -감사보고서는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이를 3개월간 공시
임직원 임금 체계 조정	-연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하고, 연차휴가는 17일만 보상하고 그 외의 휴가는 휴가사용촉진제를 사용 -조합장은 연봉 5천만원, 전무는 연봉 6천만원, 상무는 연봉 5천5백만원으로 조정(퇴직금 지급 가능, 연봉에는 급여·보너스·기타 급여 포함)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까지만 함 -하위직 직원이 상위직 직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
농협 교육을 정례화	-대의원협의회와 협의하여 농협 교육을 연 2회 실시 -직원 육성을 위해 연 2회 교육 실시
대의원협의회 구성	

고 △각종 회의자료와 내부 규정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조합원 교육을 강화하며 △회원농축협 내의 방만한 운영구조를 바로 잡아 △대출금리 인하와 경제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조합 운영 공개와 합리적인 급여 조정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에 지역농협 개혁운동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조합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정 및 지침, 회의 결과, 예결산 자료 등의 정보들이 조합원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민조합원들은 조합 경영의 현실 및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의원총회 및 임원 선거 등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열성적인 한농연 회원과 농민조합원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도 몇몇 조합들은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농축협과 조합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훨씬 커지게 만들기도 한다.

둘째, 농민조합원들이 방만한 농축협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농축협의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무이자 자금 지원이나 불용자산 매각으로 장부상에만 흑자 경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농축협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가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농가경제의 부실이 저절로 농축협 경영 위기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농신보의 대위변제 처리 금액이 조합 당 평균 4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농축협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협 조합장이나 임원, 고위 직원들의 급여는 이같은 농가경제 및 농협 경영 여건과는 상관없이 인상되어 왔다는 것이 농민조합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당면한 농업 위기, 특히 농축협의 존립까지 위협받게 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연봉 500만원짜리 농민들이 고액 연봉의 농축협 임직원을 먹여 살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는 게 농민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총체적인 난맥상을 해결하고, 농축협을 진정한 농민조합원의 조직으로 되돌리기 위해 과연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조합 구성원 사이에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여 농축협의 임직원과 농민 조합원 모두가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농민조합원 스스로가 농축협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좀더 건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농축협의 임직원 또한, 그간의 낭비요소는 없었는지, 농민조합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낳았던 잘못된 관행과 모순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농축협을 살려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만들어 합의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한농연중앙연합회가 작년부터 강조해 온「농협 개혁과제 합의운동」과 올해 소책자 자료집을 통해 보급했던「우리 농협 현황조사」운동을 통해, 농협 개혁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임금 조정, 대출

금리 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다. 궁극적인 농협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농협 개혁을 통해 농민조합원이 진정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웃한 한농연 회원들부터 깊이 있게 생각하고 토론해야 한다. 우리 농업을 살리고,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여 농민조합원들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는 것이 농협 개혁의 목표이다.

물론 단기간의 임금 삭감과 인력 구조조정 투쟁을 통해 비용 절감 등 가시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 농축협업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보이지 않는 불신과 대립의 벽을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농축협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농협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2. 농협중앙회의 '새농촌·새농협 운동'에 대한 평가

9월 14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새농촌·새농협 운동' 방안은,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개혁 요구사항들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 여건에 농민조합원과 농축협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 조치들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주목해야 할 것이다. 9월 정기국회 개원 직후에 발표된 '새농촌·새농협 운동' 방안은, 「농협법」 개정안 및 법 개정 이외의 각종 개혁 과제와 맞물려 보다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농협중앙회는 '새농촌·새농협 운동'을 통해, ▲지역농협의 체질 개선, 완전 자립경영기반 구축과 함께 ▲농협중앙회의 조직·사업 체계를 지역농협 지도·지원 중심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사업 일대 혁신 ▲농촌 문화·복지사업 확대와 농촌사랑운동 전개 등을 통해 “창립 차원의 운영 대혁신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조합장 및 전상무의 급여체계를「연봉제+성과급제」로의 개편과 함께 ▲전무 임기제와 상임이사제 도입 ▲외부전문가 영입 등의 조치들은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회원농축협에 대한 무분별한 무이자 자금 지원을 지양하고 ▲유통사업 등을 위한 선별적이며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유통사업 무이자자금 1조원을 새로 조성하여 회원농축협의 산지유통 능력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 및 소비지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축산물 산지·소비지 유통 혁신을 위한 도매 마케팅 전담 조직 운영 및 ▲유통사업 무이자자금 1조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농협 지도 지원 강화'를 위해 전 시군지부에 3급 직원으로 유통전문역을 배치하겠다는 농협중앙회의 계획은, 한농연 및 농업계 내외부에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조합원들이 대표적인 '옥상옥' 조직으로 비판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강화를 위한 명분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농협중앙회는 출범부터 100여명이 넘는 '유통전문역'을 각 시군

지부에 파견하였다. 하지만, '유통전문역' 등의 비전문성 및 각 시군지부의 조직·사업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시도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 등 3대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혁신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대표이사 및 고위 임직원 선출 등 농민조합원 중심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요구해 온 「인사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교육지원위원회」, 「여성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사항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농협 전체 조직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원·회원농축협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새농촌·새농협 운동' 주요 실천내용

□ 지역농협의 체질 개선, 완전 자립경영기반 구축

- 조합 경영진단 실시, 약체조합은 구조조정·합병
- 합병추진 조합에 중앙회 지원 대폭 확대, 자율합병 적극 유도
- 조합장, 전·상무 급여체계 개선(연봉제+성과급)
- 전무임기제 실시, 상임 이사제 확대와 외부전문가 영입
-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진단하는 '사회성 평가제도' 도입
- 농업인 상호금융 대출금리 은행권 수준으로 지속 운용

□ 중앙회 조직·사업, 지역농협 지도 지원 중심체제 개편

- 중앙본부에 조합경영기반 구축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 지역농협 자금지원, 유통사업 등 선별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환
- 전 시군지부에 유통전문역 배치, 유통사업 지원기능 활성화
- 선진기법 인사관리제 도입, 사업별 전문가 양성
- 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한 협동조합 의식교육 강화

□ 농축산물 유통사업 일대 혁신

- 대형유통업체 대상 도매 마케팅 전담 추진조직 설치, 대형 '하나로마트'와 슈퍼마켓 등 민간소매업체를 체인화
- 유통사업 무이자자금 1조원 새로 조성
- 도시조합에 농축산물 판매장 확충, 판매사업 비중 확대
- 생산이력제 등 품질관리체계 확립, 친환경농산물 공급·판로 확대
- 양질의 우리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사업 참여

□ 농촌 문화·복지사업 확대와 농촌사랑운동 전개

- 5천억원 규모의 '농협문화복지재단'을 통해 문화·복지사업 추진
- 1천억원 규모의 '농협장학재단'을 운용, 농업인자녀에 교육비 지원
- 중앙본부 건물에 '쌀 갤러리' 설치, 쌀의 중요성 집중 홍보

치열한 유통시장·금융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농협중앙회 전체의 조직 및 운영 형태·인력 배치 등의 총체적인 재편은 거부해서는 안되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지금의 농협중앙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례로 농협중앙회 전체 직원 중의 8할이 신용사업에 투입되어 있고, 중앙회 및 회원조합 노조가 금융부문 산별 조직에 속해 있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수익사업의 순이익 중 상당수가 정책금융 관련 이차보전 및 시군 공금고 수입, 각종 정책대행사업 수수료로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조직 구조와 직원 배치형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농민중심적 농축산물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한 공격적 경영이 이뤄지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은 위에 제시된 농협중앙회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추진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자본금 확충 문제(중앙회 신경분리시 총 7조 8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의 어려움 때문에, 중앙회 신경분리 조건의 충족이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미「월간 한농연」을 통해 소개된 프랑스 및 유럽 국가의 농협 및 농정추진 조직의 사례처럼, '지배'와 '집행'의 분리를 통한 농협 및 농관련 조직의 발전은 농업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농민 대표가 농민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전문적인 직원들이 원활히 집행해 나가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들이 농협중앙회의 '재

농촌·새농협 운동'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의 농협 개혁운동의 중요 과제로 제기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농민조합원과 회원농축협은 물론이거니와, 농협중앙회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과 자성이 있어야만 근본적인 농협 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350만 농민과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농림부 안에 연내에「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속에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위한 농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농협 전체의 조직·사업 혁신, 시군지부 폐지, 시도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 등의 핵심 개혁과제는 물론, 농협법 개정 이외의 각종 개혁 과제를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0만 농민의 미래가 걸린 농협 개혁의 문제를 보다 책임있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아울러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농협법」 개정을 완료하여, 근본적인 농협 개혁을 위한 입법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성의 있는 대응도 절실하다.

과거의 기득권과 관행에 안주하여 무사안일을 외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농협을 진정한 농민조합원의 조직으로 건설하기 위한 농협 구성원 모두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참여 의식이 필요하다. **한농연**